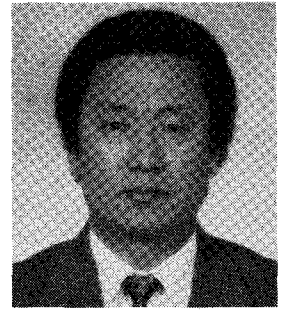


月刊「電氣와 安全」에 바란다

독자에게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내용으로 풍요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 은 상

동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가 고고의 성을 올린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아울러 협회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신속한 정보교환, 굴절되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내걸고 월간 『전기외안전』을 창간한 후 10개월이 되어갑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시대의 흐름속에 월간지의 위상이 우리 업계에 지표가 되지 않은 때가 드물었지만 올해는 특히 회원사의 냉정하면서도 기대에 찬 시선이 월간 『전기외안전』과 그 편집인들에게 주시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계에서 문민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 주어진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월간지의 할일이요, 그 결과를 올바르게 회원사에게 알리는 일도 월간지가 해야될 일임을 온 회원사가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가 진실로 회원사의 진정한 여론과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이의 타개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한다면 월간지는 창간당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간 『전기외안전』은 이미 우리 전기용품 제조업계의 힘찬 전진과 변혁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도 스스로 발전시키는 데 능장을 부린다면 이 업계가 등을 돌리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월간지가 창간된지 1년이 가까오는 이때에 협회 임직원의 진정한 봉사정신

과 알찬 내용의 편집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노력을 회원사와 독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의 타개와 절실히 고대하는 신정보의 보급을 위한 조용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독자들이 알고싶어 하는 지식을 끊임없이 채워주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독자에게 보여 신뢰를 받는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독자와 고통과 아픔을 같이하는 월간지가 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간지는 독자들의 참여에 의하여 성장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보나 소식의 자유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원하지 않는 월간지들은 편집과 운영의 난조로 도태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월간지는 독자에게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내용으로 풍요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간지들의 과도한 경쟁심리는 질을 저하시키고 독자에게 중복되는 메시지를 절달하는 쪽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회의 월간지도 대내외적으로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한된 내용과 경직성, 한정된 독자층 등 좋은 월간지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점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의를 보여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기와안전』은 회원사의 광범위한 애로수렴 기능을 확대하여 신속, 정확한 잡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는 업계와 관련된 지식을 직접 접할 기회가 드문 현실에서 월간지는 보도와 전달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월간지가 일반 언론매체와 같이 전기업계에서 영향력을 구사하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할 것이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은 더구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그러한 월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독자의 여론이 숨쉬는 곳에 정책의 열매가 맺히고, 활발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공업입국』의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정보교환과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건실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월간 『전기와안전』은 스스로가 거듭나야 합니다. 월간지가 독자를 외면하고, 독선적이고, 편향적일때 오랜 불황이 지속된 우리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는 잡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월간지가 우리 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업체의 의견이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정책 시행을 주도하는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월간지가 영원한 등대 역할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회원업체의 신뢰를 받는 매체로서 미래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기와안전』은 업계의 홍보와 지식제공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업계와 아픔을 함께하는 믿음직한 반력자로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위한”, “전기용품 제조업계에 의한” 막역한 친구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요수출품목 자율품질기준 제정

공진청은 현행 수출검사법에 의한 사전의무검사제가 폐지되고 수출업체의 자율적인 의뢰검사제로 전환되는데 맞춰 수출품 자율품질기준을 제정,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절차간소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품에 대한 사전의무검사를 금년중 폐지할 경우 관련업체들이 적정수준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자율품질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또, 바이어들이 공인검사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 기준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수출품자율품질기준 제정지원 및 품질상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의류·원사직물·전기전자·금속·화학등 주요수출품목 1천9백 47개 품목

(HS10단위기준)에 대해 금년중 자율검사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또 각 수출단체가 추가제정을 요청할 경우는 수출실적등을 감안, 자율검사기준을 새로 재정하고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거나 국내외관련규격 또는 기준이 변경돼 개정하지 않고는 대외성가에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시로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기준제정 및 개정은 관련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어의 품

질요구동향 및 회사의 품질관리수준등을 조사하고 유사기준등을 검토·수출품 품질기준전문위원회(위원장 : 공진청검사국장)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와함께 수출업체의 품질상 애로사항을 상시 상담지원하고 수출업체의 품질기준제정 요청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각 검사소에 수출품 품질상담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상담실에서는 수출품 품질클레임에 대한 검증과 수출지역별 품질규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전준비지도, 수출업체의 품질관리방법 및 기준제정 지원, 수출품 품질의뢰검사등에 대한 상담및 안내를 맞도록 할 계획이다.

유망企業 지원對象 확대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를 개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유망중소기업과 유망수출기업

에 대해 자금 및 기술지원등을 우대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가 최근들어 활발히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키 위해 유망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50인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종업원 100인이하 제조업체로 발굴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유망수출기업도 종전 연간 직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만달러이상, 고위상품 수출비중이나 對日수출비율이 20%이상인 기업 또는 국제규격획득업체는 연간 직수출실적 50만달러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30만달러이상으로 각각 발굴대상을 확대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유망소기업의 발굴기관도 확대, 기존 금융기관(31개)과 중진공, 산업기술정보원외에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지정, 기술지원을 보완키로 했으며 유망수출기업 발굴기관은 현행(금융기관·貿公)대로 유지키로 했다.

발굴추천기관도 기존 무역협회·중소기업협중앙회등 10개기관외에 8개 종합상사를 발굴추천기관으로 추가지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굴기간의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연계지원을 도모키위해 상공자원부내 유망중소기업 종합지원단(중소기업국)에 유망중소기업이 연계지원을 요청하면 원하는 타기관으로 부터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지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이 발굴한 업체의 경우 적기 자금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비롯 업체가 요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시 우대), 중진공(구조조정기금 대출 및 기술지원 우대), 貿公(해외무역관을 유망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상품구매단 방문시 상담지원), 산업기술정보원(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지원)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지원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 각 발굴기관이 발굴업체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등 능동적으로 업계

의 애로사항을 파악,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발굴기관이 우수성공 사례를 발굴, 전파토록해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유망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회를 개최, 관료확대를 도모토록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졸업업체(수도권기업 5년, 지방소재기업 6년)도 발굴기관 자체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별·발굴기관별로 이 업종 교류회를 결성, 정보·기술·기능등의 교류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로 신제품과 신시장 개발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굴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을 실시, 발굴지원기관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 제도운용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家電제품 特消稅인하 시급

가전제품에 대해 15~30%가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가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개발의욕 저해를 초래하고 밀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돼 특소세의 대폭적인 인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특소세가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30.5%의 신장세를 보였던 국내가전산업의 시판액이 작년 1월~10월까지의 전년동기에 비해 3.7%가 감소한 것을 비



롯 수출부진으로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부과도 큰요인의 하나라고 지적, 특소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했다.

특히 특소세 부과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등을 통해 추가적인 간접세부담을 유발, 가전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국내시장기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밀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특소세를 포함한 간접세율 수준자체도 우리나라는 컬러TV가 31.45~38.6%, VCR이 45.75%, 냉장고가 31.45~38.6%, 세탁기가 38.6%, 청소기가 31.45%에 달하는데 비해 日本은 3%, 美國은 4~9%, 대만은 0%(세탁기·청소기)나 13%(컬러TV·VCR·냉장고)에 불과, 국내업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800cc이하의 소형차에는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서민소득계층물품인 14인치 컬러TV는 1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고 보편적인 가정용품인 VCR은 2천 α 이상의 최고급승용차와 같은 2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특소세의 기본취지인 단일세율의 역진성 해소와 소득재분

배 기능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세계가전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정보가전의 경우 현재 PC단독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PC가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결합, 복합제품이 되면 AV기기에 부과되는 15~30%의 특소세를 제품전체에 적용,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그 결과 소비위축과 업계의 신제품개발 저해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높은 간접세는 내수

시장가격과 수출가격과의 격차를 크게 확대시켜 잦은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특소세의 대폭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관련, 보급이 보편화된 21인치이하 컬러TV와 300리터이하 냉장고·세탁기·녹음기·전자레인지등은 특소세를 폐지하고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수확대가 필요한 21인치 이상 컬러TV와 VCR 등은 10%포인트이상의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 실효성에 의구심

중소업체는 대기업들의 中企 지원책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차원으로 확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요망하고 있다.

중소업체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對中企 지원책을 앞다퉀 발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분야는 대규모 자금지원책이다.

유수그룹들이 갑자기 천억원

대의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이보다 납품대금을 현금내지 단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企協의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중 결제기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60일이내는 17.3%에 불과하고 60~90일 22.2%, 90~120일 이상 27.4%인 상황에서 별도의 자금지원은 실효성을 떠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중소 한 경영자는 “자금을 직접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하청생산에 소요되는 자금만큼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등 거래를 통한 지원책 모색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소기업체는 대기업들이 납품제품의 품질 향상이 가능토록 뒷받침해 달라고 요망하고 있다.

납품시 품질불량을 이유로 가격을 깎거나 아예 물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설립하거나 별도부서를 설치, 공정한 납품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면 중소기업은 기술 및 품질향상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중소기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中·대기업간 납품관계가 더욱 중요한 전자·기계분야 중소기업들은 품질인정을 위한 공증기관설립이 신제품개발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냉장고의 국내 시판에 이어 수출용 제품개발을 추진, 내년부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냉동공조업계도 기존냉매인 CFC와 대체냉매인 HCFC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터보냉동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원세기, 범양냉방등 터보냉동기제조업체들은 터보냉동기용 냉매인 CFC-11을 대체하는 냉매로 HCFC-123이 유력시됨에 따라 양냉매 모두 사용 가능한 겸용 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HCFC-123은 냉매특성이 CFC-11과 거의 유사한 반면, 오존층 파괴지수(ODP)및 지구온난지수(GWP)가 CFC-11의 50분의 1정도에 불과, 터보냉동기용 대체냉매로 유력시되고 있는 물질이다.

경원세기는 냉매압축기와 전동기 유니트를 입체화시키고 고성능 전열관을 채택, 냉매누설을 최소화한 HCFC-123겸용터보냉동기를 개발, 시판중이다.

범양냉방도 최근 냉매압축기 및 증발기용 절연과의 기능을 향상시킨 대체냉매겸용 냉동시스템 개발을 마무리짓고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CFC對替物質개발 活氣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일명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우전자는 대체냉매인 HCFC-134a를 사용한 냉장고를 개발,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

지난 89년부터 60억원의 개발비와 30명의 인력을 투입, 이번 냉장고의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미 신뢰성 테스트도 끝마쳤다.

350리터급의 대체냉장고(FRB-35CH)는 또 발포제로 물을 50%이상 사용, CFC-11의 사용량을 대폭 줄였으며 세정제로도 CFC-113대신 대기환경에 유해한 염소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알칼리수계 세정제를 사용했다.

CFC대체 냉장고는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제품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